

연금시장리뷰

경제현안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산업 이슈: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IBS) 시장 동향
경제 이슈: 체감경기 회복 지연

퇴직연금

이슈: 고령사회 인구부담 감소를 위한 고용정책

세심록

버려진 쓰레기의 법칙

Book Review

불평등의 대가(Price of Inequality)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
공동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현안에 대한 심명자료
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우측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실물 동향: 6월 수출입 동반부진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월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5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수출입은 감소세를 보임
 - 수출입: 자동차(-1.6%), 석유제품(-7.7%), 일반기계(-10.7%) 등 수출이 전년대비 0.9% 감소하였지만 수입도 원유(-6.4%), 철강(-18.5%) 등이 줄어 전년동월대비 1.8% 감소
 - 무역수지: 수출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어 무역수지는 55.2억 달러 흑자를 기록
- 2013년 하반기에도 미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 등으로 수출이 개선되나, 엔저 영향 본격화, 중국의 내수 부진 등으로 개선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임

○ 금융 동향: 해외 리스크 감소로 국내 금융시장은 상승

- 차이나 리스크의 완화와 미국 기업 실적 호조 등으로 해외 주요 금융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안정적인 상승세를 나타냄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6월 24일 3.12%에서 7월 9일 현재 2.99%로 0.13%p 하락
 -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 증가 등으로 6월 24일 1,163.5원에서 7월 9일 현재 1,139.5원으로 24.0원 하락
 - 코스피 지수도 미국 실적 호조 등으로 선진국 주요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6월 24일 1,799.0에서 7월 9일 1,830.4로 상승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1/4	6/30	7/9
실물 지표	GDP성장률(%)	3.4	2.8	2.4	1.5	1.5	1.5 ^p	-	-
	산업생산(%)	7.2	4.2	1.5	0.3	1.2	-1.7	-1.5	-
	소비자물가(%)	4.2	3.0	2.4	2.4	1.7	1.4	1.0	1.0
	실업률(%)	3.4	3.8	3.3	3.0	2.8	3.6	3.0	3.1
	경상수지(억달러)	54.9	25.6	111.4	145.6	149.4	100.2	86.4	-
금융 지표	국고채3년물(%)	3.68	3.45	3.39	2.88	2.81	2.68	3.12	2.99
	원/달러(원)	1,083.2	1,131.3	1,152.1	1,132.9	1,090.3	1,084.8	1,163.5	1,139.5
	코스피지수(P)	2,100.7	2,014.0	1,854.0	1,900.5	1,997.1	2,004.9	1,799.0	1,830.4

주: 1)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금융지표 중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기간 중 평균값이며 코스피 지수는 기간말 기준임.

2) 실물지표 중 6월 24일은 5월, 7월 9일은 6월 수치임.

□ 산업 이슈: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IBS) 시장 동향

○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IBS) 개요

- (정의)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Intelligent Building System)은 건물 내 산재하는 여러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
 - 정보통신기술(ICT)과 건설의 융합, 빌딩 에너지 관리의 중요성 증가,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은 IBS의 확산을 가속화
- (사업 구조) IBS 관련 사업은 기획 및 컨설팅,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단계로 구성
- (그룹 관련성) 건설 사업(아산), 승강기 및 자동화시스템 사업(엘리베이터), 시스템통합 사업(유엔아이) 경험은 IBS 사업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

○ 시장 규모

- 국내 IBS 시장은 2015년에 약 3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세계 IBS 시장은 2021년 1,464억 달러로 연평균 7.3% 성장 전망

<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IBS) 사업 구조 >



* DID: Digital Information Display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 DMR: Digital Meeting Room (전자 회의실)

□ 경제 이슈: 체감경기 회복 지연² - 경제적 행복감 불안한 회복세

□ 체감경기 지표의 개선 지연

- 실질소득과 실질소비지출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체감경기 지표가 부진하고 삶의 질도 OECD 국가대비 매우 낮은 수준임
 - 가계의 월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이 2012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3.6%에서 2013년 1/4분기 0.3%로 급락했고, 실질소비지출 증가율도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 OECD가 발표한 삶의 질 지수도 36개국 중 27위로 낮은데 삶의 만족도, 일과 삶의 균형 등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경제정책 관련 국민의식 조사

- 낮은 체감경기
 - 2013년 6월 현재 우리 국민의 91.1%는 가계빚 증가,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경기 회복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음
 - 응답자의 91%가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고, 단지 8.9%만이 경기 회복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연령별로는 30~40대, 3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자,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경기 회복을 더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함
 -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가계빚 증가(34.7%), 자산가치 하락(23.0%), 일자리 부족(20.9%) 등의 순으로 꼽혔음
 -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서는 생활물가 안정, 부동산 시장 침체 방지 등이 필요함
 - 2013년 하반기 체감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생활물가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이 44.8%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시장 침체 방지 12.5%, 수출 성장세 지속 9.4% 등이 뒤를 이었음
 - 여성, 직장인, 저소득자, 저학력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생활물가 안정이 중요하다고 꼽았음

²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13-22호, “체감경기 회복 지연” 2013. 7. 1.에 발표

○ 새정부 고용정책에 대한 국민참여 의지 높아

- 우리 국민들은 새정부 경제 정책 중 '고용 안정'과 '복지 서비스 향상'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조사됨
 - 새정부 경제 정책 중 가장 기대되는 것으로 33.3%는 '고용안정'을 29.3%는 '복지 서비스 향상'이라고 응답함
- 우리 국민들의 64.7%는 임금피크제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조사됨
 - 전체 응답자 685명 중 64.7%가 임금피크제 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고, 27.6%만이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힘. 참여할 의사가 없는 이유는 연봉감소와 조기 퇴직 후 제2인생 시작을 비슷하게 꼽았음
 - 특히, 남성, 50대 이상, 고액 연봉자들이 임금피크제 참여의사가 더 높았음
- 우리 국민들의 61%는 시간제 일자리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차별 가능성과 낮은 소득이 시간제 일자리를 회피하는 원인으로 작용
 - 총 응답자 1004명 중 61%가 시간제 일자리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고, 30.9%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조사됨. 참여 의사가 없는 응답자들은 차별 가능성과 낮은 소득을 원인으로 꼽았음
 - 기혼자, 주부, 40~50대, 저소득층, 저학력자를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 참여 의사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경제 부진에도 경제적 행복감은 소폭 상승

- 경기 부진 지속 등에도 불구하고 2013년 상반기 경제적 행복지수는 41.4로 전기대비 1.0p 상승함
 - 경제적 행복지수는 2013년 상반기 내내 지속된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생활물가 안정, 복지 확대 등에 따라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 하반기 경기 불안에 대한 우려로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하락

- 2013년 하반기에 대한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125.8로 전기대비 2.8p 하락 전환되어 우리 국민들의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이 밝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시사점

- 첫째, 우리 국민의 91.1%가 경기 회복감을 느끼고 못하고 있고 체감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활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만큼, 정부는 생활-체감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가계빚 증가는 우리 국민들의 경기 회복감을 가장 낮추는 원인인 만큼 가계 빚 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컨설팅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3년 하반기 전력난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택시요금 인상, 환율급변동 등으로 국민들의 생활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각 요인별로 물가 안정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임
 - 또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복지 확대가 찬반 논쟁으로 번지지 않고 보편적 인식 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

- 둘째, 우리 국민들의 60% 이상이 임금 피크제, 시간제 일자리 등에 대해 참여 의사는 있지만 성별, 세대별, 소득 수준별, 직종별로 차이가 나는 만큼 미스매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함
 - 임금 피크제는 남성, 50대 이상, 고액 연봉자들의 참여 의사가 더 높고, 시간제 일자리는 기혼자, 주부, 40~50대, 저소득층, 저학력자들의 참여의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된 만큼 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적절히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
 - 또한,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소개할 수 있는 고용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활성화 시켜야 함

- 셋째, 경제적 행복감은 경기 변동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우리 국민들의 하반기 경제에 대한 불안감도 높은 만큼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적 행복감을 개선시켜 나가야 함
 - 특히, 대내외 경제 불안 요인에 대한 꾸준한 점검과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부동산 경기 회복 부진에 대한 대응 등도 요구됨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선임연구원(02-2072-6217, chjss@hri.co.kr)

□ 이슈: 고령사회 인구부담 감소를 위한 고용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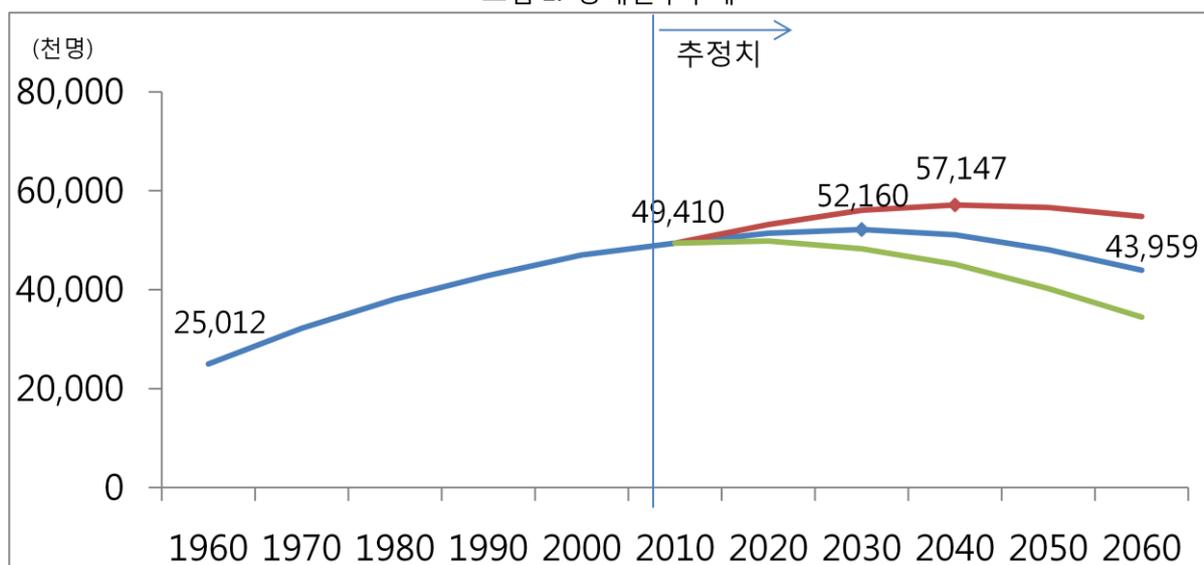
- 젊은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노인들의 적절한 소득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의 정책이 직면한 문제들 중 주요한 한가지라 할 수 있음.
 - 고령화 사회의 미래는 포괄적이고 조화로운 사회보장으로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한가의 성공여부에 달려있음.
- 경제성장과 함께 고용증진은 사회보장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요소이며 고령인구에 대한 경제적부담을 덜고 복지제도 전반에 기여할 수 있음.
 - 최근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임으로 해서 인구학적 변화에 대해 최소한 25년은 지지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 OECD는 고령노동자의 조기퇴직을 가능한 늦추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인다면, 2030년까지는 매년 GDP가 성장하고 현저히 높은 경제성장율을 보일 수 있다고 예측함.
- 고령인구가 장래 고용성장을 이끌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역발상을 가져, 장기적으로 고용성장의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대안으로 보아야 함.
 - 연금제도는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개인이나 국가의 안정적인 고령사회를 줄수 있지만, 그 한계와 지속성은 보장할 수 없음.
 - 숙련된 노동자의 조기 퇴직은 향후 인적 자본의 손실과 연계되는 바, 정부와 기업은 숙련노동의 고용을 유지하여 잠재적 편익을 얻을 수 있을 수 있는 방안의 모색되어야 함.
- 가능한 그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고령자와 여성의 고용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참여의 기간을 연장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
 -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위기를 안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거론됨. 북유럽 국가들은 여성이 취업률이 높음에도 출산율도 함께 높다는 것을 보여줌.
- 고용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이 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
 - 생산활동을 그만두는 조기퇴직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는데, 조기퇴직의 지양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연령차별을 없애는 것이 중요.

□ 현황

○ 고령사회 변화에 대한 준비 필요

- 고령화는 그 사회의 인구중에서 노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늙어가는 사회'를 걱정하는 것을 말함. 이러한 고령화는 저출산과 상관없이 사망률의 감소로 지속되고 세계적으로 퍼져갈 것임
- 1980년대 이래 전세계적으로 생산가능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는 2000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2050년에 전세계 인구의 16.2%,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38.2%가 65세 이상의 인구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노동생산의 주축인 30-40대는 이미 200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음
- 가족의 기능과 역할의 감소와 상실은 사회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이는 다시 개인에게 돌아가는 브메랑이 될 것임. 고령화로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더 많은 연금수급자들이 발생하고, 이들을 책임질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고 있음
- 이에 사람들은 더 오래 일하게 될 것이고, 부양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부담은 증가할 것임.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무엇을 준비하지 생각해 봄

< 그림 1. 장래인구추계 >



* 자료 : 통계청(2011)

○ 고령인구의 사회적 지속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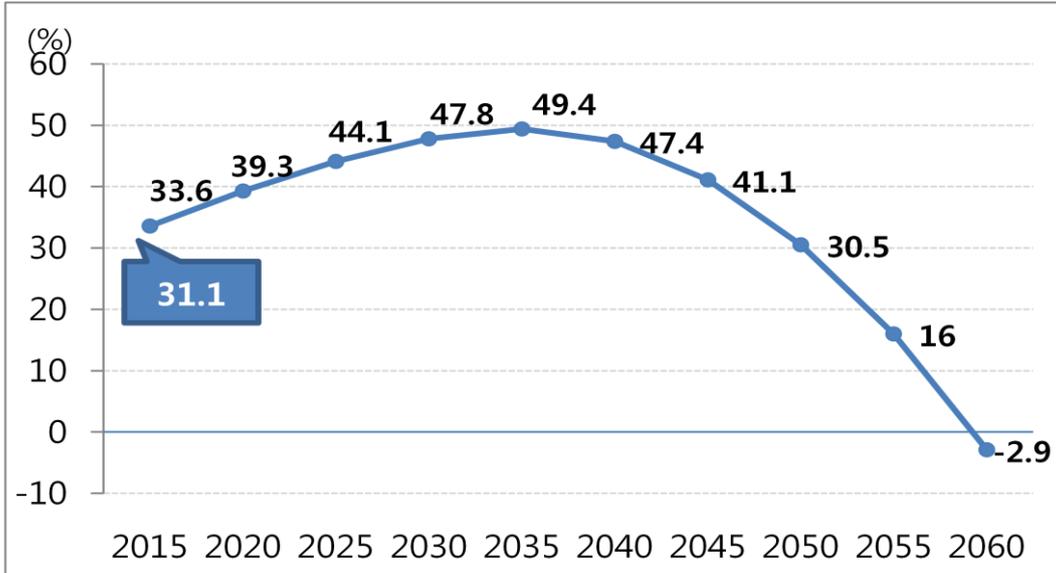
- 젊은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노인들의 적절한 소득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의 주요정책의 한가지임
-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심각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인구 부양부담의 문제는 사회보장체계를 지속성에 관심을 높여가고 있음
- 고령인구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역시 중요. 만약, 사회적인 책임이 아니라 고령자 개인의 선택과 책임의 문제로 보는 것은 사회의 분열과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 높음
- 고령화 사회의 미래는 포괄적이고 조화로운 사회보장으로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함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 할 수 있음

□ 고용정책 관련 주요 이슈

○ 연금정책에 의한 위험성

- 생산활동 시기에 노후준비를 못한 자들에게 적절한 소득을 위한 기초적인 연금을 사회보장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은 중요한 것임
 -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2043년 적립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60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그림 2 참조)
- 연금지급 수준은 수급자 개개인들이 가난하지 않게 하는 수준이 되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들의 삶에 적합한 삶의 기준을 보장하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임
-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전형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음.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회속에서 수급대상 고령자들을 2가지로 구분되도록 조장하는데, 먼저 '보호'차원에서 국가에 의존하는 집단과 다른 집단은 '자립지원' 차원에서 자신 스스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 등 경제활동을 하는 것임
 -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을 편입시키는 것이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 노인들은 연금을 통해 자신의 소득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함. 노인들이 소득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노동시장, 투자시장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세 가지 주요 위험을 고려하여야 함

< 그림 2. GDP 대비 국민연금 적립기금 비율 전망 >



*자료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 고령화 등으로 2044년부터 연금급여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의 합을 초과하는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기금 적립금이 소진 될 것으로 예상됨

○ 노후 소득 빈곤과 사회적 보호

- 노후빈곤과 소득불안정은 노인들로 하여금 제도권 밖의 비공식적인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근로에 종사하게 함. 이로 인하여, 비인권적인 상황에 놓이거나 질병, 출산, 실업, 노령과 같은 주요한 위험으로부터 거의 보호받고 있지 못하게 됨
- 불안정하거나, 비공식적인 고용상태의 근로자에게 적절한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개선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 연금제도 유지를 위한 고용창출의 필요성

- 출산율, 퇴직연령, 노동시장기능에 대한 국제적 변수들은 정치적 개입과 사회적 변화에 의하여 상당히 변화될 여지가 있음. 특히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 공적연금이든 사적연금이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은 결국 미래의 고용창출에 좌우될 것임. 경제성장과 함께 고용증진은 사회보장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요소임
- 최근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임으로, 인구학적 변화에 대해 최소한 25 년은 지지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 특히, 유럽국가들은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노동력공급의 파급영향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음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은 이민정책을 통해 노동공급의 감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스웨덴의 경우는 노동력공급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서 퇴직연령을 올리고 이민을 두배 증가시키는 등의 정책을 실행하였음
- 일본의 경우에는 이민정책과 출산율회복정책을 조화롭게 하고 적절한 가족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로 노령사회의 부담을 해소하고 있음
- OECD는 고령노동자의 조기퇴직을 가능한 늦추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인다면, 2030년까지는 매년 GDP가 성장하고 현저히 높은 경제성장율을 보일 수 있다고 예측하였음
- 이러한 연금제도에 대한 지원 증가와 고용증대는 고령인구에 대한 경제적부담을 덜고 복지제도 전반에 기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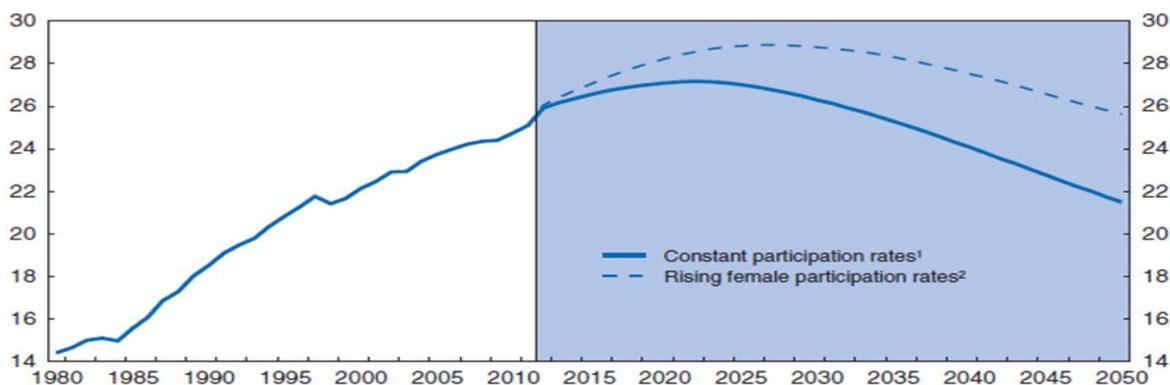
○ 고령인력의 활용과 노동의 숙련화

- 많은 국가들은 이미 오랫동안 불완전고용 또는 실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오랜기간동안 실업을 감소와 고용증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곤경에 처한데다가 인구의 고령화라는 장벽은 설상가상이 되고 있음
- 고령인구가 장래 고용성장을 이끌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역발상을 가져, 장기적으로 고용성장의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대안으로 보아야 함
- 많은 유럽국가의 일부 분야에서는 숙련된 노동자들의 부족현상이 발생. 이는 베이비붐세대들 같이 인구구조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정 연령대가 퇴직을 맞이하게 되는 것과 관련 있음
- 고용증대의 성공여부는 실업자들이 얼마나 노동시장으로 편입될 수 있고 재진입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교육과 직업훈련 및 능력별로 적절한 구직활동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우리는 종종 나이든 노동자가 젊은사람보다 덜 생산적이라 생각함. 하지만, 이는 고령노동자가 지난 생산활동기간에 쌓아온 풍부한 경험으로 더 큰 생산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임.
- 숙련된 노동자의 조기 퇴직은 향후 인적 자본의 손실과 연계됨. 정부와 기업은 숙련노동의 고용을 유지하여 잠재적 편익을 얻을 수 있을 수 있는 방안의 모색되어야 함

○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위기를 안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거론됨. 북유럽 국가들은 여성이 취업률이 높음에도 출산율도 함께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고 있음
- 특히,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정에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가장의 경우에는 더욱 두드러진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또한, 이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노동시장에 참여가 확대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수가 증가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형태라는 관점에서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 만일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대부분 파트타임이나 임시직 등의 직종에서만 증가를 보인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이게 될 수밖에 없음
- 아래의 그림 3 은 경제참가율이 현재 상태로 유지될 경우 2020 년 전후로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여성인력의 경제참여율을 높인다면,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를 늦출 수 있음

<그림 3. 여성인력 참가율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추정 >



자료: OECD Economic Surveys: Korea(2012)

- 주: 1. 각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
- 2. 각 연령대 여성 참가율이 2050년에 현재의 남성 참가율 수준에 도달한다고 가정

○ 조기퇴직 저지와 고용유지

- 고용증진 전략중 중요한 요소중 하나는 조기퇴직을 최대한 저지하는 것임.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고령자들의 건강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퇴직연령은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만일 노인인구의 노동시장참여를 확대한다면, 연금체계의 지속가능성이 3배정도 강화될 것이고,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 . 많은 노동력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가 경제성장 기여
 - . 실업연금이나 장애연금 등과 같은 현금성 연금의 지급을 연기
 - . 부가적인 조세 수입과 기금조성 등 연금재정 뿐만 아니라 다른 급여의 재정부분에 도움
- 고용은 생계유지 수단일 뿐 아니라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이 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 조기퇴직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함. 조기퇴직의 지양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연령차별을 없애는 것이 중요

한양대학교 보건학과 송기민 교수 (02-2220-2798, haieung@hanyang.ac.kr)

□ 洗心錄

□ 버려진 쓰레기의 법칙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해 두면 된다고 한다. 주변에 쓰레기 더미가 있는 경우 무심코 더하여 버리는 데 주저함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깨끗한 곳에서는 쓰레기를 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보면 버려진 쓰레기가 또 다른 쓰레기를 부르게 되는 것이다.

굴이 탱자가 된다는 ‘굴화위지(橘化爲枳)’, 『안자춘추(晏子春秋)』 「내잡(內雜)」편에 나오는 말로 강남에 심은 굴을 기후와 토양이 다른 강북에 심어 놓으면 탱자가 되듯이 주위 환경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

춘추시대 초나라 영왕과 제나라 재상 안영의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화다. 포승줄에 묶여 지나가던 죄수를 가리키며 영왕이 묻고 신하가 답하였다. “저 죄수는 어디 놈이냐?”, “제나라 출신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제나라 사람들은 모두 도적질을 잘하는가?”

대화를 듣고 있던 안영은 제나라 출신인 자기를 조롱하기 위해 구민 일이라고 짐작하고 영왕에게 말했다. “저 죄인은 제나라에서 살 때는 선량하였으나 초나라에 살더니 도적이 되었습니다. 이는 초나라의 풍토가 그를 도적으로 만든 것이지 제나라 사람이라는 사실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에 깨달은 바가 컸던 영왕은 이후 예의를 다해 안영을 대하였다.

기업 경영에서도 마찬가지다. 비전이나 경영 전략과 같은 거창한 작업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정작 사소하지만 치명적일 수 있는 것들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고객이 겪은 단 한 번의 불쾌한 경험, 어지럽게 정리된 매장, 지나가는 말로 흘린 약속 등 어찌 보면 사소할 수도 있는 실수가 또 다른 실수를 부르게 되고 결국 기업의 앞날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문제는 사소한 곳에서 발생하며 사실 예방이 쉽지는 않다. 잘나가던 우유회사가 한 영업사원의 실수로 존폐를 걱정하게 된 최근 국내 기업의 사례처럼. 청소는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水隨方圓之器(수수방원지기)하고 人依善惡之友(인의선악지우)니라.

물은 그 그릇의 모양에 따라 변하고 사람은 선하거나 악한 그 벗의 심성을 따른다.

- 명심보감(明心寶鑑)

□ Book Review

□ 도서 및 저자 소개

- 제목: 불평등의 대가(Price of Inequality)
- 저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정보의 비대칭성 연구)
 - MIT 경제학 박사 / 클린턴 행정부 '경제자문회의 의장'
 - 현재 美컬럼비아 대학교 교수
 - 저서 : 《세계화와 그 불만》, 《끝나지 않은 추락》등 다수

□ 주요 내용

- (개요) 미국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 원인과 문제점, 대안에 관하여 잘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음
 - 미국의 불평등 실태와 불평등을 초래하는 규제완화, 지대추구 행위, 세계화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불평등이 초래하는 생산성- 효율성- 사회통합력 하락, 그리고 불평등 개선을 위한 과제(규제 강화, 조세제도 누진성 강화 등)를 제시
- (불평등 실태) 미국의 불평등은 세계적으로 심각한 편이며, 과거에 비해서도 더 심화되고 있음
 - 미국의 지니계수는 1980년 0.4에서 현재 0.48로 더 악화되었으며,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 등은 0.3내외로 양호한 상태
 - 약30년 전 상위1%의 소득은 전체의 12%에 해당했으나, 2007년엔 17%로 증가
- (생활수준 하락)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의료보험 수혜자가 감소하고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등 미국인들의 생활수준이 하락하고 있음
 - 대침체 이후 약5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의료보험 수급자격을 상실했으며, 87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200만 명은 99주 이상의 장기실업 상태에 있음
 - 고용시장의 안전망이 부족하여, 실업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는 38%에 불과하고, 실업자의 절반 이상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됨.

○ **(불평등의 배경) 불평등 심화의 배경을 지대추구 행위, 숙련편향적인 과학기술의 변화, 세계화의 진행, 정부의 감세와 규제완화 등으로 설명**

- 스탠더드 오일, AT&T,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이 독점적 시장에서 초과이익을 노리는 지대추구 행위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정부의 보조금, 정부조달 사업, 파생금융상품 규제완화 등도 비슷한 지대추구 행위
- 지난 25년간 숙련편향적(skill-biased)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중간수준의 기술과 일자리가 없어지고, 하위기술의 일자리는 늘어나면서 양극화 심해짐
- 세계화에 따른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은 임금수준을 낮게 유지하고, 노동보호를 후퇴시키는 등 불평등 심화에 기여

○ **(불평등의 문제점) 불평등의 심화는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사회적 통합력을 하락시켜, 경제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함**

- 갈수록 심해지는 불평등은 공공투자와 공교육 지원을 위축시키며, 이로 인해 성장잠재력을 감소시키고, 경제 전체적인 효율성도 저해함
- 저소득층의 계층상승 기회 감소는 경제 전체의 활력과 사회통합력을 떨어뜨리고, 낮은 임금과 그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초래
- 불평등의 심화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연결되고 있으며, 투표와 민주주의에 대한 혐오감 조장을 통해 투표율을 낮추고 있음. 최근 美대선 투표율 57%.

○ **(불평등 개선을 위한 과제) 중앙은행 제도의 개선, 세금관련 제도의 개선, 선거자금 등 정치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음**

- 상위1%의 지대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중앙은행의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세제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중앙은행이 인플레이 억제에 집착하기 보다는 실업률 관리를 우선해야 함. 왜냐하면, 일자리와 임금은 가장 중요한 소득 원천이며, 총수요 증대로 이어짐
- 선거자금의 한도를 규정하고, 선거방송의 무료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정치제도를 개혁하고 투표율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중하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예를 들면 교육접근권을 강화하고 서민들의 저축을 지원하며, 의료보장과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것임
-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마련하고 규제완화 경쟁을 막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HRI 리더스포럼은
CEO들을 위한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입니다.

[HRI리더스포럼 혜택]

- 경제·경영부터 인문사회에 걸친 다양한 주제강연
- CreativeTV(usociety.co.kr)VIP멤버십 제공
- 경제·경영도서 베스트셀러 제공(年 12권)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 리더십교육프로그램 참여기회 마련
- 경제핫이슈분석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연회비]

- 1명 : 연100만원 ■ 3명 : 연200만원 ■ 5명 : 연300만원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시간

19:00~21:00(2h)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유홍준 명지대 교수(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 Tel. 02-2072-6246, 6247 · Fax. 02-2072-6249 ·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